



튀르키예 지진, 진짜 구호는 이제부터다



‘비영리 투명성 토크콘서트’ 24일 온·오프라인 개최

한국모금가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지주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공익 캠페인 ‘비욘드T(Beyond T)’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토크콘서트에는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윤지현 한국모금가협회 전문 회원, 조성재 마이오렌지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영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비영리 전문가들이 소규모 비영리 단체를 위해 개발한 투명성 가이드도 공개된다. 투명성 가이드는 단체 직원들이 가이드에 따라 법률상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기부품법, 공익 법인 준수 사항, 투명성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모금가협회는 투명성 가이드 활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토크콘서트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중소 규모의 비영리단체는 활동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에 맞는 투명성 원칙이 필요하다”며 “토크콘서트와 투명성 가이드를 통해 비영리를 둘러싼 다양한 투명성 이슈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모금가협회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문일우 더나은미래 기자

[프로] 대지진 석 달, 튀르키예를 가다

깨진 콘크리트와 유리 조각들이 걸음을 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잘그락거린다. 지난 2일(이하 현지 시간) 튀르키예 하타이주(州)의 ‘안타키아’ 지역. 붕괴된 건물 잔해 위로 정체를 몰래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다.

“석회 가루예요. 건물 아래 매몰된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뿌려놓은 겁니다. 냄새는 막을 수 있지만 모여드는 파리들을 막기는 어렵죠.” 손정은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대리(튀르키예월드비전 파견)가 말했다.

2월 6일 튀르키예를 강타한 규모 7.8(1차), 7.5(2차)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사망했다. 2만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초기 한 달간 진행된 ‘긴급구호’는 마무리됐지만,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피해 주민의 삶을 지진 이전으로 ‘재건 복구’하는 일이다. 지난 1~5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튀르키예 피해 지역을 돌아왔다.

◇한반도 크기의 영토가 무너졌다

안타키아는 이번 지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건축물의 87%가 무너져 거주 불가능 상태가 된 ‘유령 도시’ 안타키아를 걸어서 이동했다. 바스러진 건물 잔해를 중앙비로 밀어내는 ‘도시 청소’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유서프 총괄매니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너진 그대로였는데 얼마 전부터 잔해를 치운 곳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1년 안에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 NGO들은 복구에 최소 5년, 길게는 수십 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의 크기가 ‘한반도’ 면적에 달할 정도로 넓어 단기간에 복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택 89만채, 아파트 34만동, 건물 30만동이 이번 지진으로 무너졌다. 집 잃은 이재민 대부분은 임시 거주지에서 지낸다. 자기 집 앞마당에 텐트를 설치한 사람들도 있지만, ‘텐트촌’을 이뤄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런 텐트촌의 상당수가 산발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텐트촌이라 화장실, 수도 등 기본 위생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루르파-하타이-아드야만-김시원 더나은미래 기자
1.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산루르파주(州)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 가족. 2. 2일 방문한 하타이주의 안타키아 지역. 이번 지진으로 안타키아의 건축물 87%가 부서졌다. 3. 4일 아드야만주 시타센터에 있는 컨테이너 센터를 찾았다. 총 600가구의 지진 이재민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4. 4일 아드야만주의 시골마을 코셀리. 해발 647m에 위치하고 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도시보다 초기 지원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서프 총괄매니저는 “하타이주의 경우 여름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덥고 습해 텐트에서 지낼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또 여름이 되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영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장은 “정부가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입주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별 화장실과 인프라를 갖춘 ‘컨테이너 하우스’ 보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3×7m의 ‘컨테이너 집’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지진 소식에 우리 국민의 위로와 모금이 쏟아졌다. 한국월드비전에 모인 튀르키예 지진 모금액은 약 87억8000만원이다(5월 18일 기준). 지진 발생 직후 튀르키예에 가장 먼저 긴급구호대응단을 파견한 것도 한국월드비전이었다. 우리나라 외교부와 함께 정부 수송기로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기도 했다. 유서프 총괄매니저는 “튀르키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해준 한국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쉼터(거주지)다. 월드비전이 하타이주에 있는 또 다른 도시 ‘키리칸’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원하게 된 이유다.

지붕과 담장이 내려앉은 주택, 기둥만 남은 건물들. 키리칸에서도 안타키아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좁은 골목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니 평탄하게 다져진 광활한 공터가 등장했다. 튀르키예 정부, 현지 NGO인 국제청신원사(IBC)와 함께 조성한 ‘키리칸 컨테이너 캠프’. 400동의 컨테이너 하우스가 입주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3×7m 크기의 컨테이너 하우스에 들어서자 아담한 소파가 놓인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오른쪽에 방 하나, 왼쪽에는 욕실이 딸려 있었다. 4~5명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침대, 옷장, 냉장고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출장에 동행한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한국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이재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면서 “총 2500명이 살게 될 이 캠프에서는 보건 시설, 아동 센터, 식당 등이 생겨날 예정이며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마켓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자네프-하타이-산루르파-아드야만-김시원 더나은미래 기자 E4면에 계속

‘나눔’은 어떻게 사내문화가 됐을까?

세계가 주목한 K-기업시민

지난달 30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는 전 세계에서 온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전문가들로 북적였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날부터 사흘간 열린 ‘2023 글로벌 기업시민콘퍼런스(ICCC)’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ICCC는 미국 보스턴칼리지 경영대학 산하 기업시민연구소(BC-CIC)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주체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콘퍼런스의 슬로건은 ‘회복탄력성을 다시 생각하다(Rethink Resilience)’였다. 제너럴모터스, 네슬레, 월드디즈니, 페덱스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리더와 실무자 500여 명이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나눴다.



포스코 재량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아시아 기업 최초로 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BCCIC) 혁신상을 받았다. 최영(왼쪽에서 넷째)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이 수상 후 트로피를 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포스코, 포스코1%나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SK, SK사회적가치연구원 관계자들은 주요 세션 무대에 올라 소셜임팩트 확산 사례를 공

유했다. 포스코는 울릉도 앞바다에 바다숲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앞당긴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상(Innovation Awards) 환경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 수상이다.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최근 세계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참석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면서 “발표 현장에서 관심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직원 98%가 만드는 소셜임팩트

“포스코1%나눔재단 설립 초기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금은 참여율이 98%에 이릅니다. 이 일을 담당하면서 느낀 건 직원들이 직접 나눔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사 둘째 날이었던 지난 1일 최영 실장은 ‘임팩트의 성장(Grow Your Impact: Expand Your

Team)’ 세션에서 CSR의 가치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최 실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에는 111개에 달하는 사내 봉사단이 있다. 직원들은 제철소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을 발휘해 도배, 농기구 수리, 전기 수리 같은 재능나눔 봉사를 한다. 봉사가 필수 활동은 아니지만 이른바 ‘봉사랑’ 예제는 회사 차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누적 20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한 직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3000시간을 넘기면 대표 이사가 직접 인증패와 금배지를 수여한다. 1만 시간을 넘기면 포항 분사 인근 Park1538에 마련된 명예의전당에 3년간 이름을 올리게 된다. 포스코에 따르면, 봉사 5000시간 이상인 직원은 30명이다. 매주 4시간씩 24년을 활동해야 쌓을 수 있는 시간이다. 최영은 더나은미래 기자 E4면에 계속

INSIDE

E2 국제구호개발 NGO ‘기후대응’ 강화한다

E3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눈점은?

더나은미래 만드는 사람들
편집국장 김시원
취재 문일우 팀장
최지은·김수연·황원규 기자
백승훈 인턴기자
공익사업팀 이영은·이세화 매니저
문의 (02) 724-7860
독자의견 및 제보 betterfuture@chosun.com

“가뭄에 강한 작물로 농부 수업을합니다”

NGO ‘기후대응’ 강화한다

아프리카 케냐의 5월, 예년 같으면 매일 저녁 비가 내리는 ‘우기(雨期)’지만 기다리는 비는 오지 않는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길게는 6월 초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비가 내린다. 이후 8월까지 ‘소건기’를 지나, 9월부터 11월까지 비가 조금씩 내리는 ‘소우기’가 온다. 농민들과 유목민들은 이러한 기후 패턴에 맞춰 살아왔다. 이러한 일상이 깨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가뭄이 시작됐다. 올해로 4년째다. 농작물은 말라버렸고 가축이 먹을 풀마저 자라지 않았다. 폐사한 동물 사체는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케냐를 포함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위기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들도 지원 사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의 자립을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농법을 전수하고 유통 구조를 만들어왔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가뭄에 강한 종자를 보급하고, 시들했던 산림 조성 사업은 규모를 키우고 있다.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기후 패턴’ 깨지자 소득·교육·의료까지 복합 지원

현재 케냐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곳은 마사비트·투르카나·만데라 등 북부 지역이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맞댄 마사비트는 유목민이 많다. 이들은 염소, 낙타, 양 등을 키우며 생계를 잇는다. 그런데 가뭄으로 풀이 자라지 않으면서 가축의 약 80%가 폐사했다. 지난 2월 케냐식량안보조정그룹(KFSS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 260여만 마리 폐사로 약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가축 가격은 내려가고, 곡물 가격은 상승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아프리카 동북부의 ‘아프리카 뿔’ 국가에서 2100만 명이 식량 위기를 겪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남은 굿네이버스 케냐대표는 “가축을 팔아서 건초를 사야 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다”며 “유목민들에게 가축 폐사는 전제



가뭄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케냐 북부 마사비트(Marsabit)의 한 마을에 유일한 식수원마저 오염됐다. 작은 사진은 주민들의 생계 수단인 가축이 폐사한 모습. 굿네이버스 제공

동아프리카 가뭄 4년째 흉작에 가축 80% 폐사

기후대응 농부학교 운영 기상예측 시스템 보급

국제구호개발 NGO의 기후대응 활동

- 농업**
가뭄에 강한 작물 공급, 종자은행 설치, 관개시설 확대
- 수자원**
건조 지역에 지하수 자원 발굴, 해안 지역 식수 공급시설 보호
- 에너지**
지열, 태양열,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원 다양화
- 재난경보**
기상예측시스템 운영·관리 역량 강화,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산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현지 정부는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고 지역의 국회의원조차 국제구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 기후 연구단체인 세계기후특성(WWA)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가뭄 발생률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00배 높아졌다.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WWA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2022년 경우 패턴 등 관측 데이터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지금보다 기온이 1.2도 낮은 산업화 환경에서는 동일한 강수량이라도 가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기온이 높아지면서 토양의 수분을 증발시켜 가뭄이 가속화됐다고 본 것이다.

긴 가뭄에 따라금 내리는 빗물은 또 다른 불행 가져온다. 엄청난 양의 폭우가 단시간에 쏟아지면서 홍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남은 대표는 “나무가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틀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고, 들판에 놓인 동물 사체를 훑고 지나간 물줄기가 낮은 지대로 모이면서 각 지역의 유일한 식수원마저 오염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영향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다. 주민의 소득 감소는 아이들의 교육 단절로 이어진다. 홍수와 산사태를 피해 생활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보건소에 깨끗한 물이 보급되지 않으면서 의료 부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기후위기는 농업으로부터 채광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또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괴롭힌다”며 “기후변화의 속도에 비해 대응은 다소 늦은 편이지만 국제 NGO들의 활동이 기후 대응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도 세밀한 접근 필요

기후위기가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대응은 세밀하게 접근하는 게 핵심이다. 아무리 필요한 지원이라도 주민들이 거부하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김선 본부장은 “과거 농업 생산량이 급감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제성이 높은 버섯 재배를 권한 적이 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재배 작물을 바꾼다는 건 대대로 내려왔던 농사법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해서 직업을 바꾸는 것만큼 큰 부담

을 느낀다”고 했다. 이 때문에 소득 테스트를 진행한다. 농부 몇몇을 선발해 일부 농지에서 가뭄에 강한 작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의 일종이다.

성공 사례가 나오면 마을 전체가 움직인다. 성과를 중시하는 이유다.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말 기준 세계 41개 사업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 사례는 지난 2년간 필리핀 타를라크 지역에서 진행한 농부학교와 커뮤니티 종자은행이다. 굿네이버스는 현지 지방정부와 기상청, 농민·과학자연합(MASIPAG)과 협력해 농업학교 수료 농부 93명을 육성하고 2000명 넘는 농민에게 새로운 농법을 전수했다. 또 버섯 품종 86종을 가져와 적응성 시험을 거쳐 현지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16종을 선별하기도 했다.

말라위,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에서는 가뭄 저항성 종자를 보급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해 스마트농업을 지원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열·태양열·바이오가스 등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개발해 에너지 자립을 유도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는 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 예측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벌였다. 특히 에티오피아 도도타·지웨이독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주민 2500명이 동참해 나무 5만 그루를 심었다.

기후 대응에 나선 NGO의 가장 큰 고민은 재원 마련이다. 특히 수자원 관리나 기상 경보 등에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물을 설치하려면 과거에 비해 더 깊이 파야 한다. 굿네이버스는 23일부터 동아프리카 기후 대응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후원금은 극심한 가뭄과 식량난을 겪는 지역에서 아동 보호, 식량 지원, 보건 의료 사업 등에 쓰인다.

김선 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일이고 지금도 변화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도 개선하기 쉽지 않다”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과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재원만큼이나 글로벌 NGO와 국제기구 간 정보교환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일호 더너머미래 기자

비영리스타트업, 지역 공동체 회복 나선다

성과공유회 ‘스테이지-α’ 개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다음세대재단이 초기 비영리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성과공유회가 지난 17일 열렸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를 매년 발굴하는 지원 사업이다. 비영리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총 26곳의 성장을 도왔다. 선정 단체는 지원금 3000만원과 사무 공간을 받고, 약 8개월 동안 사업 자문과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지원받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전용 오피스 동력사에서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4기 참가 단체는 ▲모모로 ▲유엔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 ▲언브로코코리아 ▲잇다사회적협동조합 ▲청년채움 ▲청소년직접행동 ▲플레이어스 등 7곳이다.

‘모모로’는 육아 우울감으로 고립받는 양육자 간의 정보 공유와 정서 지원을 돕는 단체다. 양육자들에게 뉴스레터,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팁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양육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돕는 놀이 키트를 개발

사랑의열매·다음세대재단 2019년 이후 26곳 발굴

고립청년·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집중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동력사에서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성과 공유회 ‘스테이지-α(알파)’가 개최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중이다. ‘유엔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의 재취업 준비를 돕고 환혼 육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합원 5명으로 시작한 조합은 현재 100명 넘는 조합원과 함께하고 있다. 향후 ‘예비 노인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노년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3문화 아동(TCK·Third Culture Kids)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언브로코코리아’는 커뮤니티 운영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제3문화 아동은 성장기에 2개 이상의 문화권을 경험하는 아동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이나 탈북청소년

등을 포함한다. ‘잇다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 행사와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잇다사회적협동조합에선 교육 복지 대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청년채움’은 청년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거주지 기반의 청년 커뮤니티 ‘구름상륙’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환 레터 등의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청년 간의 소통을 돕는다. ‘청소년직접행동’은 청소년 스스로가 기후위기, 불평등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4기 참가 단체

단체명	주요 활동
모모로	양육자 간 정보 공유와 정서 지원을 위한 육아 공동체 조성
언브로코코리아	제3 문화 아동(TCK)과 가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유엔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 진로 탐색과 환혼 육아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잇다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내 소규모 도서관의 역량 강화 지원
청년채움	청년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 기반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직접행동	전국 단위 청소년 사회 참여 동아리 육성
플레이어스	친환경 놀이 콘텐츠 개발과 차별 없는 통합 놀이터 조성

자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참여 플랫폼이다. 특히 청소년 자치 모임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꾸렸고, 지금까지 청소년 사회 참여 동아리 15개를 양성했다.

심리 치료 전문가와 놀이치료 디자이너가 협력해 만든 ‘플레이어스’는 아이·노인·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와 공간을 기획한다. 다양한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놀이를 연구하고 친환경 놀이감도 개발하고 있다.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올해 육성 한 팀들은 생애 전반에 걸친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의미 있다”며 “이들 단체가 사

회 곳곳에서 만들어갈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지난 1~3기에 선정된 단체들이 펼치는 활동으로는 농산어촌 청소년과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멘토리’(1기), 정월 활동을 통해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는 ‘마인드풀가드너스’(2기), 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슈가스퀘어’(3기) 등이 있다.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에 참가한 단체들이 이번 경험을 디딤돌 삼아 비영리 생태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훈 더너머미래 인턴기자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 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인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 70 이

2027년까지 추진할 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 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 “미고용 기업에 대한 ‘채찍’ 부족하다”

하면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만, 71이 되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 없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진희 대표는 “독일의 경우 의학적 기준이 아

-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다섯가지 논점**
- 1 경계선 지능인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사각지대’ 해소
 - 2 근로지원인 교육 지원 강화
 - 3 개인 맞춤형 고용지원 체계 구축
 - 4 의무고용률 미충족 대기업에 고용 컨설팅 제공
 - 5 고용부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어디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닌 ‘직업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고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우리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고용 지원을 제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향상을 위한 센터를 따로 조성할 정도로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충해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정책 검토’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 근로지원인 교육에 ‘현장실습’ 신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인력이다. 정부는 근로지원인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현장실습’을 신설,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와 손발을 맞추려면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노법래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지원인이 장애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업무에 불필요하게 깊게 개입하거나, 장애인을 방치하는 등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진희 대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지원인의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3 개인별 고용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장애 유형,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개인별 고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 이력에 기반한 심층 상담을 1시간씩 2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한다는 설명이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맞춤형 고용 지원은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분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취업 이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증이나 고령의 장애인, 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근로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번 계획안에 ‘취업 후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4 의무고용률 1% 미만 기업 ‘컨설팅’ 제공

의무고용률 미충족 기업은 고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직무를 함께 개발하고, 근로자도 연결해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 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기업 고용지원단팀을 신설하고, 10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 미만인 기업 50곳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5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3.1% 미만인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박경수 교수는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장애인용 직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맞는 장애인을 구하다 보니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며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채찍’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일한 채찍이라면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만 최종 공표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노법래 교수는 “실질적인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치 않다”며 “개정된 명단공표 기준이 특별히 규제의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최근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고용부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아쉽다는 의견이다. 노 교수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압박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원·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직원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인터뷰] 조혁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월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로 설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회사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볼게요. 장애인 더 뽑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조혁신(사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더나은미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A사의 인사 관리자와 나는 대화를 공유했다. A사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을 지키지 못해 2021년에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6500만원을 냈다. 연 매출 1조원에 상시 근로자는 1100여 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6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사의 상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조혁신 연구위원은 “최저 임금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직원의 월평균 임금으로 올리면 A사의 고용부담금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다”며 “이러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게 더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을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인가?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업마다 사업장 크기,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대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다.” -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가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 고용부담금 차등해야

‘부담금이 더 경제적’ 잘못된 인식 바뀔 것



나를 수 있다.

“조금은 선부터 우려다.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게 고용부담금의 목적이 아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다.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고용부담금이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기업이 당연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생긴다.” -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고용부담금 이야기는 빠져 있다.

“기업 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제는 지난 2018년 제5차 기본계획에서 처음 언급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기초액을 차등해 가산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당시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5년 만에 나온 이번 기본계획에서 고용부담금 개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게 무척 아쉽다.” - 부담금 높이는 게 효과가 있을까.

“1000명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 6명을 만났다. 고용부담금을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으로 높

이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모두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뭐든 할 거라고 하더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고용 방안을 고민하게 될 거다.”

-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확대 방안은 없나?

“현재 정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수준을 평가할 때 몇 명을 고용했는지 양적 지표만 본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정량적 수치만 쫓기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생긴다. 일례로 기업이 장애인을 2~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해 지속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분으로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형태도 고용률만큼이나 중요하다. 고용 형태는 고용부담금을 가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별 상시 근로자 월평균 임금으로 부담기초액을 산정하고, 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고용부담금을 감액하는 식이다. 현재는 고용 인원이 늘수록 고용부담금을 감액하는데,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

- 이러한 변화를 이끌 현실적 방안이 있을까. “단계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높여야 한다. 우선 월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고용부담금 관련 논의를 장애인 당사자와 정부·기업 관계자, 노조,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노동특별위원회’ (가칭) 같은 것도 만들면 좋겠다. 지금은 소수 전문가가 정책을 논의하고 제도를 바꾸는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서로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업, 10년새 1170곳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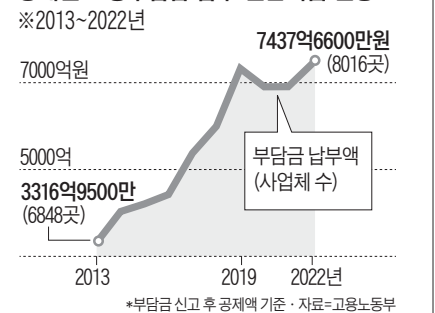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수가 10년 새 1170여 곳 늘었다. 이들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 규모는 같은 기간 2.2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나은미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2022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는 2013년 6848곳에서 2022년 8016곳으로 10년 만에 17% 증가했다. 이 기업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같은 기간 3316억9500만원에서 7437억6600만원으로 약 124% 늘었다.

국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 1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1만4942곳이다. 전체의 절반 넘는 기업(53.6%)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낸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배경에는 낮은 부담금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3.1%) 이행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미고용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1만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5%만 충족해도 납부 금액은 145만원가량으로 줄고, 의무고용인원의 75%를 충족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만 납부한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인 189만원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따른 복지 제도 도입이나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도 한몫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민간기업 현황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률 상승 추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27%에서 2016년 2.56%, 2020년 2.91%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21년 2.89%로 되레 하락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 증가해 2년 전 수준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와전기주식회사 등 3곳은 장애인 근로자를 아예 고용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용부담금 상향을 꼽는다. 최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부담금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고용부담금 상향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임직원 150명이 사회공헌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까닭은

세계가 주목한 K-기업시민

터전에서 계속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3만5000명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한다. 전체 임직원의 약 98%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직원들이 낸 기부금과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회사가 낸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재단이 설립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금한 금액은 총 855억원이다. 임직원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국내 재단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다. 기금은 미래 세대 교육, 장애인 편의성 증대, 장애인 예술가 활동 등에 사용된다.

최 실장은 임직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요소로 '직원과의 소통'과 '투명성'을 꼽았다. 재단 내에 사업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참석 자격을 얻은 임직원 150명이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눈다. 재단은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담아 공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리얼밸류(Real Value)' 경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했다. 리얼밸류란 기업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가치로, 재무적인 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 원장은 "ESG 관점에서는 외부의 환경·사회적 측면을 '리스크'로 보지만, 리얼밸류 경영에서는 가치를 창출할 또 다른 '기회'로 본다"며 "이런 관점을 가지면 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분류한 리얼밸류 경영의 3단계도 소개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검토하고,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선별한다. 두 번째 단계



포스코 임직원 봉사단이 전남 광양 하포마을에서 낡은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국내 대기업 3社 ICCS서 관심 한몸에

포스코경영연구원 '리얼밸류경영' 철학과 실천 방식 공유

현대차정몽구재단 "체인지메이커 육성이 기업의 지속가능 전략"



에서는 선별된 자산을 재분석하고 결합, 강화해 가치 창출의 전체 지도를 그려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창출한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가 아닌 스토리 위

주로 전달한다. 고 원장은 "환경·사회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리얼밸류는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데이터 중심 보고서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시민 경영에 '한류'가 분다

포스코는 아시아기업 최초로 보스턴칼리지 BCCCC 혁신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BCCCC는 ▲소셜임팩트 체인지메이커 ▲변혁적 파트너십 ▲환경 혁신 ▲혁신의 확장 각 부문에서 혁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포스코는 인공지능 트리트론을 활용해 바다숲을 조성하고 폐각을 절감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 혁신 부문 상을 받았다. 포스코 사례는 BCCCC가 발행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저널에 소개될 예정이다.

콘퍼런스 이튿날 진행된 '미래 환경 트렌드' 세션에서는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온드림소사이터티'가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온드림소사이터티는 지난해 4월 재단이 사회 혁신가를 위해 서울 중구 명동에 조성한 공간이다. 록펠러재단, 링컨센터, 구글캠퍼스 등 해외 공간 플랫폼 사례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최재호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은 "온드림소사이터티 개관 1년 만에 6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며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

다"고 말했다.

재단은 공익 목적의 행사를 여는 단계에 무료로 공간을 대관한다. 비영리단체, 대학, 협동조합 등에서 대관을 요청해 기후위기, 인구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열렸다. 지난 1년 동안 총 256회, 월평균 21.3회 행사가 진행됐다. 친환경 임팩트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의 오피스 공간인 '임팩트스페이스'도 있다. 최 총장은 "오피스 공간에 재생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식스티헤르츠', 이차전지 분리막 리사이클링 기업 '라잇루트' 등 소셜벤처 4곳이 입주했다"며 "입주 기업끼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재단은 본격적으로 기후기술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총장은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단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SK사회적가치연구원은 소셜임팩트 측정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임가영 SK사회적가치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측정 방법인 DBL(Double-bottom line)과 SPC(Social Progress Credit)를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기업 재단의 임팩트 측정을 위한 학습공동체 '임팩트 파운데이션 러닝 커뮤니티' 사례도 공유했다.

오준환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은 SK 사례를 들며 스코프3(Scope3) 측정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한국의 기업시민 경영 성과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했다. 내년 ICCS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다.

주거·심리·생계... 모든 게 무너졌다

대지진 석 달, 튀르키예를 가다

터전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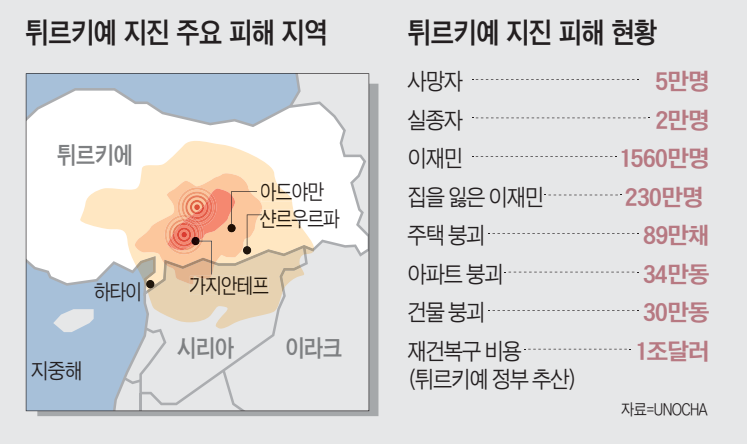
컨테이너 하우스의 입주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텐트 생활을 하는 이재민 대부분이 입주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힌 컨테이너 수는 50만개. 현재까지 보급률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조명환 회장은 "주거를 안정화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텐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컨테이너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임시 주거지가 아닌 영구주택에서 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다섯 명의 자식을 잃었다

4월 아드야만주 시골 마을 '코셀리'에서 만난 할릴(71)씨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곳까지 왔느냐"며 여러 차례 물었다.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웃 마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이 계신다.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피스타치오와 양파 농사를 짓는 인구 500명의 이 마을에도 지진이 닥쳤다. 해발 640m 고지대에 자리한 시골집들은 납작하게 주저앉았고 그 옆에 텐트가 하나씩 세워졌다. 지진을 목격한 주민들은 "멀리 농산과 너른 들판이 파도처럼 출렁거렸다"며 "무섭고 낯선 풍경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 동네에서 5명이 사망했다. 250여 명이 사는 이웃 마을에서는 20명이 죽었다.

할릴씨의 집도 지진으로 무너졌다. 집터 옆에 설치된 텐트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눴다. 그는 "지진으로 6명의 자식 중에 5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아드야만 도심의 18층짜리 아파트에 모여 살던



'지진 겪은 주민들 우울증·불안 시달려'

집·직장 잃고 물가도 올라 경제적 어려움 가중

"지진 이전으로 회복하자" 월드비전, 심리·생계 지원

자녀들이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에 깔려 한 달한시에 세상을 떠났다. 그 건물에서만 28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지진으로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에미네(48)씨도 "지진으로 친척들이 여럿 다치고 죽었다"고 했다. 가족이 함께 살던 2층 집도 사라졌다. 에미네씨는 "열두 살짜리 막내딸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첫 지진이 났을 때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잠옷을 입은 채로 밖으로 도망쳤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날 이후 착했던 막내딸이 판사님이 됐다. 자주 화를 내고 잠도 잘 못 잔다. 잘 때도 불을 켜놓고 잔다. 학교 공부에도 흥미를 잃었다. "지진의 기억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진 이후 5배 된 집세...생계 막막

재단 전문가들은 주거 지원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게 '심리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지진 등 재난으로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상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서프 총괄매니저는 "지진을 겪은 튀르키예 사람들에게서 우울증이나 불안 등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은 왜 잠이 안 오는지, 왜 불안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월드비전은 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와 정서 문제를 돌보는 전문적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한 '생계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손정은 대리는 "월 2000리라였던 집세가 지진 이후에 1만 리라로 뛰었고, 5리라였던 우유 값은 20리라로 올랐다"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재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진 피해 이재민 중 가장 취약한 가구에 총 300만달러 규모의 'E-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9500개 가구를 선정해 지역의 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구당 지원금은 316달러(약 42만원)다. 장애인·노인·아동이 포함된 가정,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시리아 난민 가정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대지진 이후 석 달이 흘렀다. 유서프 총괄매니저는 "튀르키예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진 초반 뜨거웠던 국제사회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진짜 구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지진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형제의 나라, 지진 딛고 일어서길"

[미니 인터뷰]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

-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돌아본 소감은?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직접 보고 나니 이재민들의 막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한반도 면적에 달하는 국토가 지진으로 무너졌다. 튀르키예 정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 지진 발생 이후 월드비전은 어떤 지원을 했다?

"처음 30일간 진행한 1차 긴급구호 단계에서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이재민 약 45만명을 지원했다. 튀르키예에서는 가지안테프, 아드야만, 킬리스, 산르우르프, 하타이 지역에 식수·위생, 비식량 물자, 바우처를 지원했다. 시리아에서는 이드라브와 알레포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배분했다."

- 튀르키예 정부, 현지 NGO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것 같다.

"월드비전은 튀르키예 정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기구다. 국제구호개발 NGO 가운데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곳은 월드비전과 세이브더칠드런 두 곳뿐이다. 월드비전이 튀르키예에서 활동한 지 올해로 10년차가 됐다. 튀르키예로 넘어온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사무소를 차렸고 줄곧 로컬 NGO들과 함께 일했다. 이 네트워크를 이번 지진 대응에 활용했기 때문에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 시리아 쪽도 지진 피해가 컸다고 들었다.



월드비전 제공

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더 극심한 위기에 빠지게 됐다. 건물이 무너졌는데 중장비를 동원할 방법이 없어서 건물 잔해를 손으로 파내 사람을 구조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월드비전은 튀르키예 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월드비전은 지난 3월 6일을 기점으로 지진 대응 단계를 2단계인 '조기 복구'로 전환했다. 이재민의 기본적인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수·위생, 식량, 현금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 아동들의 심리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3단계인 '재건 복구'에 돌입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재난을 딛고 일어서 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